

東北亞 地域協力を 위한 경제지정학 (geopolitical economy)적 접근

이종철*

〈 차 례 〉

- | | |
|---------------------------------|-----------------------------|
| I. 서론 | III. 경제지정학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협력 |
| II.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 | 1. 동북아 지역협력의 정치경제학 |
| 1. 전통지정학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 2. 동북아 지역협력과 국내-국제문제의 통합 |
| 2.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지정학 | 3. 스케일간의 관계로 본 동북아 지역협력 |
| 3. 경제지정학과 지역협력 | 4. 동북아의 지역성 |
| | IV. 결론 |

主要語 : 지역협력, 경제지정학, 국가중심주의, 세계화, 지방화, 지역성

I. 서론

2차대전 이래 미국이 주도한 세계 자본주의경제의 單元的 흐름에 더하여 소련/동구의 재편-新民族主義 등 多元的 힘의 흐름이 변화를 주도하는 1990년대이다. 차기 패권국가 등장 of 前단계로 보는 패권순환론의 입장에 서든, 아니면 英-美로 이어온 리버럴리즘의 최종 승리로 보는 '역사의 종료' 관점에서 보든, 부인 할 수 없는 것은 영토주권-근대국민국가를 축으로 하는 세계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스케일의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서유럽의 통합은 초국가적 흐름을 대표한다. 동시에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의 다국분열은 해묵은 국가내 지역주의와 지역분리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며 亞국가적 흐름을 넘치게 하고 있다. 두 흐름은 탈국가화를 바탕으로한 세계화의 大勢를 시사한다.

脫국가화는 어떤 새로운 주권 단위로의 재배열

이 아니라 주권개념 자체를 무색케하는 발빠른 행위들이 주도하는 경계소멸과정이라고 볼 때 특히 그렇다.

단기적으로 향후질서에서는 왈러스타인이 기대하는 세계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국가력과 非국가 행위자 사이의 '경쟁력' 싸움이 주된 이슈일 것 같다. 국가의 장래에 관한 논의는 특히 지정학이나 현실주의(realist) 국제정치학도에 중요하다. 그 연구 주류가 소위 국가중심주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토국가의 불변성을 전제로 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세계질서의 역동적 포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질서의 역동적 변화와 맞물려 동북아에서도 질서재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에게' 라는 아시아 지역주의는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지역패권을 합리화하는 구호로 제창된 이래 1950-60년대 동남아를 중심으로 反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연대를 거쳐 ASEAN 등

*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으로 일부 제도화 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비할 때 그 응집력은 아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안에서 주로 미국 시장에 의존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제가 종속이론가들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다른 한편 이미 거대한 일본경제를 축으로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정착하므로써 미국주도의 명분과 현실이 퇴색하는 변화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지역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동북아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어 동북아 지역협력 및 질서재편은 주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미숙한 지역분업구조 때문에 국가(정부)간 협상으로 시동하는 양상이어서 기존의 국가중심주의 패러다임이 아직 유효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 요인들이 국제적 질서재편과 상호작용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전개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담는데 국가중심주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지정학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까닭이다.

II.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

1. 전통 지정학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전통 지정학은 2차대전 이전의 圖式的(formal) 모델과 소위 신냉전 시대인 1970년대 후반 이래 득세한 지전략(geostrategy) 모델을 함께 일컫는다. 전통 지정학이라 하는 까닭은 학계나 일반 대중이 이것을 지정학의 통상적 用例로 보기 때문이다. 도식적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를 대륙단위의 거대한 스케일로 나누고 각 단위가 세계정치에서 어떤불변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질서 인식이다. 이를

지탱하는 것은 경합적 영토공간개념과 환경결정론이다. 맥킨더의 Heartland(Pivot)¹⁾--Inner Crescent--Outer Crescent나 페어그리브의 Heartland--Crush Zone--Sea Powers²⁾ 그리고 스파이크만의 Heartland--Rimland³⁾ 등의 분류 도식은 기본적으로 대륙세력--해양세력의 대결구도 속에서 특정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루고 그에 따라 세계질서를 조망하는 '지구적' 스케일을 보여 준다.

한편 지전략 모델은 이러한 지리적 조망을 보다 구체적인 상황, 즉 양극의 냉전구도에서 상대(곧 소련)를 견제하는 전략의 논리적 근거로 원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해양세력인 영국과 대륙세력인 프랑스/독일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이 십년 이상 禁忌였던 지정학이라는 용어와 도식적 고전모델개념이 부활한 1970년대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 퇴조를 보이기 시작하던 때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이 부활한 것은, OPEC의 등장과 일본의 경제적 浮上 등에 의해 미국의 헤게모니와 지구전략(global strategy)이 도전을 받게 된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⁴⁾ 과거 도식적 모델이 등장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도 당시의 패권국 영국이 신흥강국인 독일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며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던 때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비교이다. 맥킨더 지정학은 소위 범게르만주의에 입각한 대륙세력 독일의 영토팽창을 견제하고 영국우위의 기존질서를 지키려는 동기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⁵⁾ 실제로 맥킨더의 후기 저작에는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⁶⁾ 그러나 당시 강대국들이 도식적 모델을 실제로 국가정책에 활용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무력팽창의 논리적 도구로서 나찌즘과 결합했다는 비판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금기가 되도록 한 當者인 독일 지정학(German Geopolitik)조차 실제 독일 제삼제국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⁷⁾

도식적 모델과 지전략 모델이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역사적 상황, 즉 현상을 유지하려는 헤게몬과 그에 대한 신흥 강국의 도전을 둘러싼 갈등-각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국가경영기술(statecraft)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두 모델의 핵심은 바로 국가중심주의이다. 生老病死하는 유기체 국가이든 당구공같은 무기체 국가이든, 국가라는 존재는 내적 동일성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행위자이며 모든 이론적 분석과 실천의 기본단위이다. 양 모델에서 특정 국가나 동맹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생존전략 처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근대 영토국가의 출현 이래 국가중심주의는 비단 전통 지정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뿌리 박힌 전통이 되었는데 특히 전통 지정학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이하 '현실주의 IR이론'으로 약칭)은 영토국가의 절대성을 대전제로 한다. 국가중심주의에서 보면 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만드는 것으로서 영토주권 안에 '담긴'(contained) 존재이다. 자연질서를 '집행'하는 국가가 통계를 제공하고 사회과학이 그 자료에 의존하는 한, 지방 혹은 지역 차원의 연구나 지구적 스케일의 사회과정(global social process)을 포착하는 일은 난제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전체 과정의 한 '사례연구'이거나 국제(즉 '국가' 간)관계에 머물 수 밖에 없다.⁸⁾ 전통 지정학의 국가중심주의가 특정 국가(초강국)의 地表占領을 둘러싼 논의라면 현실주의 IR이론은--가장 단순화하면--혼란일 수 밖에 없는 국경 너머의 질서를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일이다. 이때 처방은 흔히 세력균형이나 '국제' 관행(international regime)의 수립 전략이다. 구조적 현실주의로 분류되는 월츠(K. Waltz)의 국제체계나⁹⁾ 커헤인(R. Keohane) 류의 레짐이론¹⁰⁾

등 국경너머 한 차원 위의 질서를 포착하려는 현실주의 IR이론에서도 영토국가는 핵심 단위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독일견제라는 서구/미국의 공통 인식 속에서 전통지정학과 현실주의 IR이 접맥했다는 분석도 있다.¹¹⁾

전통 지정학과 현실주의 IR이론을 관류하는 국가중심주의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큰 제약을 가한다. 이를 극복하려는 한 노력으로서 다소 생소하지만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의 관점을 제시해 본다.

2.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지정학

전통지정학이나 현실주의 IR이론으로는 논리상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정하기 힘들다. 국가가 주된 행위자인 이상, 국가간에 상대적 힘의 균형변화나 한 국가의 영향력이 증감하는 차원의 상대적 변화를 넘는 어떤 본질적 변화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리적 조건은 불변하고 국가는 선험적이고 유구한 존재라고 보는 한 전통지정학과 현실주의 IR이론에서는 비역사적인 추상화를 피할 수 없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세계질서의 큰 틀은 기술/정보혁명의 시대나 희랍의 도시국가 시대나 다를 바 없게 된다. 사실 변화란 보는 스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現存 세계질서변화가 새로운 인식을 요구할 정도로 질적인 측면을 수반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변화의 실체를 개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적실한 논리와 관점이 필요하다.

2차대전후 세계질서의 변화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로 표현되는 세계경제(world economy: 왈러스타인의 world-economy와는 구별되는 일반적 용례임)의 등장과 지역단위 경제블럭의 강화, 연방국가의 해체와 지방분리주의라는 상반된 흐름 등이다. 세계질서변화는 스케일간의 拮抗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지리학적 통찰력을 요

구한다.

세계경제는 생산/투자의 초국경화(transnationalization)를 특징으로 한다. 초국경화는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한정된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y)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¹²⁾ 생산/투자의 초국경화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행하는 어떤 통제가 따른다.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내 교역이나 기업내 교역, 가격조작(transfer pricing), 그리고 주문자상표생산 등의 활동에는 고도의 정보망이 뒷받침하는 글로벌한 통제가 필요하다. 생산/투자의 초국경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일이 있다. 국제금융에서 보듯 私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형평의 원리보다는 이자율과 같은 시장원리가 주도하게 되어 세계 자본흐름의 방향이 저개발국에서 선진산업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¹³⁾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금융도 정부차원의 개발차관(ODA)으로부터 민간은행 대출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국적기업의 생산/투자 세계화, 다국적은행의 금융세계화를 私부문의 자유방임 시장원리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의 등장은 정치, 경제, 심지어는 문화의 측면에서도 국내-국제 구분을 쉽지 않게 만든다. 1980년대 이래 極에 달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해외개발금융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의 복지가 타격을 받는 것이 한 예다.¹⁴⁾

지역단위 경제블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세계경제라는 보편적 힘으로부터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국가간 협력 혹은 '확대된 국가'로 보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에 상당하는 새로운 의 사결정단위로서 블럭을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 블럭만을 볼 때 기존의 국가개념이 변함에 따라 국가중심주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 지역경제협력이나 지역경제권의 논리와 실행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서면 국가중심주의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예컨대 국가간 관계를 블럭간 관계로 환원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도입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후자, 즉 지역단위내에서 국경의 소멸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블럭은 글로벌화의 중간단계 혹은 글로벌화와 국가간 체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동북아경제권이나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을 논할 때 등장하는 소위 '개방적 지역경제권'의 개념은 후자의 예다. 블럭을 확대된 국가로 보는 경우에도 현재의 국가 수준정도로 엄격한 境界개념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블럭은 국가간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봄이 옳다. 글로벌화와 지역블럭화는 국가-국민경제와는 상반하는 힘이다.

그러면 보다 작은 단위에서 나타나는 소위 地方化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地方化도 국경의 聖域에 상반하는 힘이다. 地方化의 이상은 배타적 소집단주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의 하부단위 혹은 국가정책의 下向示達단위로서만 지방을 이해하면 안된다. 편의상 혹은 강요된 국가화로 국경 안에 들어는 있지만, 배타적 경계와 국가의 위력에 기대어 다른 나라 지방에 대한 우위를 겨냥하지 않는, 자율적 공동체의 이념이 지방화에 암시된다. 지방화의 지리적 범위는 상호간의 차이는 존중하고 격차는 배제하는 방향에서 평등을 지향하므로써 개인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이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모토로 하는 분리주의 운동이나 소련의 해체 등은 地方化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간적 스케일로 볼 때 분화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글로벌화와 지역블럭화, 지방화는 모두 反국가중심주의의 흐름을 의미한다. 상반된 듯 하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운동과정위에서 있다. 글로벌화는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동질화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보면 단일세계경제를 향한 구심적 통합인 것 같지만 그 동질화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국가간/지역간/지방간 격차를 늘리고 동시에 그 격차의 구조에 기생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分化의 바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생산/투자의 세계화가 주도하는 글로벌화는 私益을 위해 세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地方化의 원심적 분화에 편승하고 그것을 조장하므로써, 反국경의 이념을 地方化와 공유하면서도 상반된 목표¹⁵⁾를 갖는 기이한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영토국가의 고정된 경계를 전제로 하는 접근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의 소멸은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¹⁶⁾ 하지만 기존의 국경에 저항하는 힘들이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를 포함한 어떠한 정치/사회 단위나 조직도 불변의 공간범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통 지정학이나 현실주의 IR이론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경제지정학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지정학의 개념과 유용성을 이하에 제시한다.

경제지정학이란 지정학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한 것이기도 하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에 지리적 요인을 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는, 마치 경제지리학이 경제를 다루되 지리학의 영역임을 확인하듯 지리학 분과임을 분명히 하는 용례다. 후자로 보면 정치학이나 경제학 분과이다. 한편 지리학에서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지정학적'이라는 표현은 쓰면서도 분과명으로는 지정학보다는 정치지리학을 선호하게 됐을 것이다. 구분을 하자면 지정학이 정치지리학보다는 한정적인 의미, 즉 국가단위 이상의 공간스케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지리학이 좀 더 포괄적이다. 그러나 geopolitical economy가 되어 지리, 정치, 경제를 통합함에 이르면 이런 구분도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경제지정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따로 연구할 수 없다는 정치경제학의 기본전제를 따르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정치+경제->사회]의 도식을 따르면 경제지정학은 결국 사회과정에 대한 주목임을 알 수 있다. 사회과정은 국경에 갇힌 사회구성체를 넘어 글로벌한 힘으로 세계질서를 재단하는 과정이다. 앞에 말한 생산/투자의 세계화는 사회과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지정학일 뿐 아니라 사회지정학(social geopolitics)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치경제학의 단순 정의는 '정치현상과 경제현상의 불가분성을 전제로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분야'이다. 스미스나 리카아도 등이 말한 고전적 의미의 정치경제학은 한 국가--즉, 정치--내부의 자원분배에 관한 것으로 정치·경제 현상의 통합분석과는 약간 다르다. 정치의 우위에서 경제를 논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자율성을 갖는 실체로 다루는 전통이다. 정치의 개입이 적을수록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복지가 증가한다는 자유방임의 철학으로 귀결하게 되고 이후 서구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를 잡은 정치경제학--곧 고전 및 신고전과 경제학--이다. 요컨대 '정치를 배제한 경제' 차원의 정치-경제 관계인 셈이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리버럴리즘을 극복하여, 경제관계속에 얽힌 정치적의미를 자본-노동의 갈등이라는 사회적생산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의 틀속에서 조명하므로써 정치-경제의 측면을 통합분석하고자 한다. 파워의 配分이 자원·富의 배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그 파워配分의 구조를 파악하므로써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제거한다는 실천적 사회철학을 제시하는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의 통합분석이라는 측면만을 보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치경제학적으로 보인다. 다른 전통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어느 한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

치학의 합리행위모형이나 공공선택이론은 고전과 경제학의 개념을 원용하여 개인이나 정부의 정치행태를 설명하려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치분석, 즉 정치학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시기적으로 보아 특히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이 고유한 분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바탕이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오일쇼크 등 이제껏 경제영역으로만 보았던 요소들이 국제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한편, 다국적기업활동 등 초국가적 현상의 등장으로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한 국내-국제현상의 구분이 적실치 않게 됐다는 인식때문인 듯 하다. 예를 들어 고전과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경제적 목표를 위해 통화규제 같은 등 정치적 장치를 제안하는 일이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과정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요구가 공급을 초과하여 결국 재정적자나 만성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는 식의 정치경제학적 처방·해석은--적어도 선진국 상호간에는 경제의 상호의존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보면--국가단위를 넘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IPE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다. 물론 IPE는 이 밖에도 맑시즘이나 종속이론, 남-북문제를 강조하는 발전이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다. 주목할 점은 知的 전통이 다른 여러 관점이 IPE안에서 선별적으로나마 결합하는 사실이다.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합리적행위 모델로 설명하거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강국이 주도하는 헤게모니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헤게모니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그리고 레짐이론 등이 대표적인 예다.¹⁷⁾

IPE의 등장은 본고가 제시하는 경제지정학의 개념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경제지정학의 가장 큰 특징이 정치와 경제의 통합분석이라는 정치경제학 전제를 수용한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

다. 그리고 경제지정학은 IPE의 핵심적 전제인 국내-국제, 정치-경제의 통합분석을 수용한다는 것도 전통지정학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貧國의 복지를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본 경제정책의 세계적 영향, 다른 한편으로는 南阿共의 인종차별같은 非중심국의 국내정치문제마저도 사실은 미-소 냉전구도및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와 맞닿은 것이었다는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은¹⁸⁾ 정치문제의 세계성은 통합적 접근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IPE이론의 두가지 큰 전제를 받아 들이므로서 경제지정학은 IPE의 넓은 개념 안에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지정학은 지리와 정치현상의 관계라고 하는 지정학 혹은 정치지리학의 語意를 포섭하므로서 IPE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 된다. 이때 지리 혹은 지리적 사실이란 전통지정학에서 보는 것 같이 추상화하고 불변인 物的 존재가 아니라, 위치나 자원의 전략적 가치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사적 존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지정학의 유용성은 지리학의 기본틀인 지리적 스케일을 세계질서의 설명에 원용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는 세계적 생산망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가는 集心이다. 그렇지만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구심력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離心이 된다. 어떤 스케일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지정학은 다양한 분석 스케일을 지향한다. 다양하다는 것은 자료수집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어떤 고유한 메카니즘을 갖는 공간단위의 존재를 전제로 場所, 지역 등 개념을 국가와 같은 한정된 스케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확장함까지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협력이나 지역경제권처럼 '국가너머'의 지역에 존재하는 장소성, 지역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3. 경제지정학과 지역협력

전통지정학에서는 지역경제협력 혹은 지역경제통합을 주권국가간의 영토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큰 주권단위의 성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에 대한 폭스(W. Fox)의 다음 설명은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 준다.

지정학자가 갖는 공통된 생각은, 유럽통합의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세계질서는 서유럽보다 큰 공간단위의 주권국가군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처방은 강한 유럽국가의 형성이다. 앞으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유럽이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모네(Jean Monnet)와 마쥘랭(Robert Marjolin)의 유럽통합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로마조약에 이어 EC의 창립이 가능했다.¹⁹⁾

전통지정학이 西歐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의 산물이고 그 처방은 我國이나 我邦의 생존전략이었음을 상기하면 남미와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 지정학적 사고 또한 대결-경합의 멘탈리티를 수용하므로써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한 지역협력이 지역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을 이해할만 하다.

경제지정학은 국가간/동맹간/지역간 대결의 필연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영역이나 영토의 불변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나 지역통합을 새로운 차원의 영토적 주권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지정학에서 보는 지역경제협력은 세계경제의 구심력에 대응한 중간단계의 글로벌화다. 유럽연합처럼 국가간 협의에 의한 주권통합은 예외적으로 유럽이라는 고유한 지역적 맥락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지역협력이란 타 지역에 대한 경쟁력 확보의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간 체계(states-system)가 글로벌화의 큰 흐름에 맞추어 경제적 역동성을 담으려는 과

정에서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중간단계의 글로벌화는 글로벌화의 전조이지 글로벌화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본다.

경제지정학에서 보는 지역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렇듯 과도적 글로벌화로서의 지역협력이지만 각 지역은 고유한 역사, 정치, 경제적 맥락을 바탕으로 일반화 하기 어려운 협력의 메카니즘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과도적 글로벌화의 거시적 해석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맥락을 살피는 각론적 조망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처럼 의도적, 제도적 통합을 추구하는 지역과, 일본주도의 수직분업 관계로 엮힌 동남아시아는 발전단계론의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차이가 있을 것이다.²⁰⁾

III. 경제지정학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협력

생산/투자의 글로벌화는 국가단위의 경제-복지 정책이나 국토균형개발정책 등 형평을 지향하는 노력과 상충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특히 세계의 낙후지역발전에는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무역의존형 경제에서 저경쟁력 부문이나 낙후지역은 그들이 그나마 국내정치 압력이나 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인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내세워 비교열위의 요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퇴색으로 더욱 곤란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기능적 확장은 공간적 재편을 촉진한다. 냉전과 세계경제의 영향이 가장 눈에 띈 곳이 동유럽이라면 그 잠재적 충격이 가장 큰 곳은 바로 동북아다. 동북아는 19세기 이래 서구 제국주의의 외압에 노출되면서 그 주변부로 편입했다. 청일전쟁 이후엔 상대적으로 서구의 압력을 적게 받은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하고 주변

화를 면한 일본²¹⁾의 후발제국주의에 편입하는 중층적 식민지화 과정에서 민족간 갈등을 증폭하였다(조선, 대만, 만주의 경우). 2차대전 후에는 양극냉전체제의 이념갈등과 민족간 갈등(중국--소련; 남/북한--일본; 소련--일본)에 더해 경제초강국으로 등장한 일본에 대한 경제종속이라는 남북문제까지 중합한 단순치 않은 구조를 이뤄 온 곳이다. 냉전의 빗장이 풀림에 따라, 억눌렸던 경제교류와 문화적 상호작용의 흐름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지역화의 흐름을 넘치게 할 것이다. 전통지정학의 관점에서 쟁탈지역(crush zone, shatter belt) 혹은 억지점(choke point), 內儻(inner crescent) 등으로 본 동북아가 새로운 경제협력의 무대 부각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영토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이론적 패러다임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질서를 배태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정치-경제의 통합분석, 국내-국제적 역동적 관계, 스케일간의 관계, 지역성 등 앞에서 제시한 경제지정학의 요소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을 설명해 본다.

1. 동북아 지역협력의 정치경제학

한국, 일본, 중국 東北지방(黑龍江, 吉林, 遼寧의 3省), 러시아 극동지방(Maritime and Khabarovsk Krai, Amur and Sakhalin Oblast)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범위는 편의에 따라 국가를 기준으로 중국, 남-북한, 일본, 몽고, 대만, 그리고 극동러시아를 포함하는 광대한 범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아직 동북아에서는 국제화나 세계화의 수준이나 무역, 투자 등 기능적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설정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능적 연계가 미흡한 가운데 국가간 협의로 지역협력을 始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만 보면 국가중심주의 패러다임이 유효한 측면도 있

다. 그러나 국가간 협의회 구상이 가능하게 된 것 자체가 2차대전 이후 일본, 서유럽, 동아시아 NIEs 등 미국 헤게모니 안에서 배양된 국가경제와 기업들의 초국가적 활동에 따라 어느 정도 多核化가 나타났고 소련의 내부적 혼란과 같은 세계정치/경제적 변화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국가중심주의 틀만으로 동북아의 역동적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은 국민경제간/지역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다는 사실과 그 인식이다. 우선 산업간 분업의 측면에서는 극동 시베리아의 원유, 천연가스, 석탄, 유색금속, 비금속광물, 목재, 수산물, 중국 동베이 지방의 곡물(옥수수) 등 1차 상품과 남한의 철강, 직물, 자동차등 粗기술산품, 일본의 기계, 전기, 전자등 高科技산품간에 교역상의 보완관계가 뚜렷하다. 산업간 분업은 현재 일-러교역 등에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극동 시베리아와 중국 동베이 지방의 자원개발 잠재력이 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들 자원보유지역은 세계경제에 피동적으로 묶이는 단일 작물-단일 자원지역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대국으로서 거대한 국민경제를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문제형 종속관계의 우려 없는 호혜적 발전전망을 크게 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극동 시베리아의 자원개발과 三江평원 등 동베이 지방의 식량개발계획에 한-일 기업의 투자가 본격 참여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동북아의 산업내 분업은 선진 산업경제간에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일종의 기술적 수직 분업구조로서, 제품차별화에 의한 보완성이 있으나 그것이 경제적 지배-종속의 가능성을 배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소위 원세트 혹은 풀세트 산업구조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한함은 물론,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그 이전된 기술로 만든 제품이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가능성, 즉 기술-무역 연계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함으로서 일본의 기술지배를 심화한다는 설명²²⁾처럼 동북아 산업내 분업은 향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특구나 자유경제무역지대등 북한과 극동 시베리아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외자유치의 개념이 한-일간의 과거 '협력'과 같은 관행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은 수직분업을 축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협력은 상호보완의 경제적 利點과 지배-종속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조화하여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간 협상이,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행위와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협력의 모습을 만들어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길게 보면 민간부문이 주도할 것이다. 동북아의 국가간/지방간 발전격차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가 민간주도의 생산/투자의 지역단위 글로벌화문제와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2. 동북아 지역협력과 국내-국제문제의 통합

동북아 지역협력을 국가간 협의의 측면에서만 보는 경우 전술한 것 같이 사회적 역동성이 세계질서에 투영하는 흐름을 포착할 수 없다. 동북아 사회를 관류하는 특징은 국가-사회 관계에서 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국가간 힘의 강약과는 관계없이 동북아 국가는 사회에 대해 높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왔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 독재체제는 물론이고 남한,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국가가 영도하는 준중상주의적 경제정책에 나타나듯 사회는 정책의 피동적 대상일 뿐 국가정책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기능이 미약한, '영토에 갇힌' 존재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국가의 우위 배경을 역사적으로 명확히 究明하는 것은 단순치 않다. 논의를 금세기 이후로 한정시킬 때 가장 설

득력이 있는 설명은 그것이 일본통치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다.²³⁾ 특히 한국에는 이 설명이 유용할 것 같다.

대내적으로 강한 국가는 국내의 사회적 위기를 과시적 대외정책의 구사로 만회하거나 그람시가 말하는 소위 선제혁명(passive revolution)으로 호도하기 쉽다. 대내 자율성이 강한 동북아 국가간 지역협력도 대내적 위기만회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를 회유하려는 대외정책이든 사회의 압력에 따라 추진하는 대외정책이든 국가-사회관계의 역동성이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역동성은 지역안보체계나 국제분업체계 등을 통해 다른 국가, 사회의 역동성과 맞닿게 된다. 국내-국제문제의 통합과 관련한 예로서 남한의 지역격차문제와 동북아 지역협력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들어보자.

도농격차로 표현하는 정주체계상의 소위 수직적 격차는 서울 등 대도시의 과대성장과 농촌(郡) 및 소도읍의 퇴락을 나타낸다. 수직적 격차와 얽힌 地方간의 수평적 격차는 보다 큰 정치문제를 수반한다. 남한에서 1970년대 이래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이 정치적, 부족적인 갈등으로 비화하여 사회적 일체성을 크게 흔들었던 사실은 수평적 격차와 관련된 주목할만한 예다. 생산-소득의 지방적 편차에 따라 수평-수직격차가 복합한 최악의 경우였다. 이런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계획(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부문별경제개발계획(5개년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이 안된 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하는 등²⁴⁾ 지역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1982-1990년 사이 국토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4.9%)이 경제성장률(9.9%)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여차별적 투자가 쉽지않다는 것을 확인케 해준다.

이런 국내적 상황이 동북아 지역협력이라는 대외적 움직임과 얽히게 된다. 특히 투자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해외 개발투자에 참가하는 경우²⁵⁾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국내의 역차별적 투자는 더욱 어렵게 된다. 성장지역용 기확보예산 보다는 낙후지역용 미확보예산이 더욱 취약한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개발투자의 주체가 사기업이면 이런 경향은 더욱 현저할 것이다. 동베이 지방이나 두만강 하구, 연해주 지방에 저임가공형 조립산업이나 자원개발 투자를 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문제가 악화하여 비전문노동력의 결속이 무너지고 기존 낙후지방의 복지는 더욱 저하할 수 있다. 생산/투자의 글로벌화와 결합하여 농촌 등 낙후지역을 더욱 퇴락시키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내적 再編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국외의 다른 지방과 국내 낙후 지역을 자본의 논리로 연결한다는 점에서도 지역적 의미를 갖는다. 국경으로 분리됐던 지방들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해외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국내-국제문제의 구분은 더욱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요컨대 남한의 지역간 격차는 해외개발투자로 인해 더 커지고 그 투자로 열린 국내의 지방들과 해외 지방들간의 관계속에서 동북아 공간질서가 재편함에 따라 향후투자는 동북아 전반의 지방간 격차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국내-국제적 역동적 관계는 앞으로 지역협력연구에서 심각히 고려할 요소다.

3. 스케일간의 관계로 본 동북아 지역협력

앞에서 지역협력이나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과도적 글로벌화로 파악하는 경제지정학의 시각을 언급하였다. 큰 주권의 확대통합이라기 보다는 글로벌화의 지역적 표출이라는 과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는 글로벌화와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상호보완적 추세로 보는 것이다. 동북

아시아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특히 이러한 관점이 유용하다. 전통지정학적 해석의 유용성을 지탱했던 兩極의 세계구도에서 동아시아는 양 진영의 마찰지역이었다. 이런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이 대동하는 것은 양극의 소멸을 확인하는데서 나아가 이전의 마찰지역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조정지역으로서 공간적 재편을 선도하는 시험무대가 되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NAFTA, ASEAN, CIS, 대중화경제권²⁶⁾ 등 주요 경제권의 접촉지대인 동북아는 양극구도로 단절된 域內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질서에 큰 의미를 던진다. 김영호(1992)의 표현처럼 “블럭이 맞부딪치는 충돌지역을 완충지대 혹은 소프트한 조정지역으로 발전시켜”²⁷⁾ 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개방적’ 경제권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 동북아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일본, 만주, 극동 시베리아등이 인적자원이나 자원, 기술, 시장면에서 역량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와 같은 전망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4. 동북아 지역성

동북아시아 정도의 넓은 범위에 지역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일은 주의를 요한다. 지역성의 정의도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다만 地域史的²⁸⁾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 지역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문화지역으로서 동북아를 설정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본 지역성이 앞으로 생산/투자의 글로벌화라는 기능적 상호작용과 결합하여 어떠한 지역상을 만들어 갈지 관심을 요한다.

극동시베리아를 제외하면 동북아를 묶는 가장 중요한 끈의 하나가 漢字의 공유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전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어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²⁹⁾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한 공통문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언어의 친숙도--예컨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동북아시아는 이런 점에서 고유한 지역성을 갖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漢字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언어인 영어가 동아시아의 틀 안에서 어떤 상호관계를 나타낼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있는 주제다.

동북아의 지역성 형성에 기여할 또 다른 요소는 인종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공존이다. 조선족의 존재는 그 한 단면이다. 만주(동베이)지방에 200만--연변조선자치주에 80만--정도의 조선족이 漢族, 몽고족, 만주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연해주와 일본 열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포함하면 동북아 전역이 기능지역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인종적 공존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56개의 다민족국가이고 일본의 인종구성도 몽고족, 남방족, 아이누족 등으로 혼합해있지만 동북아로 한정하면 다양성은 대폭 줄어든다. 경제협력이 본격화 하면 민족과 국경의 개념에 얽매지 않는 거주/생활권의 등장으로 동북아 지역은 문화는 다양하되 이념과 생활의 수준은 더욱 균질적인 지역성을 띠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류의 지역패권주의를 도모하지 않고, 다른 한편 지역단위의 글로벌화로 공간적 재편을 겪을 지방들이 지방간 격차에 편승하는 민간자본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는 連帶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IV. 결론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간단위 혹은 과도적 단계의 글로벌화라 할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지역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을 반영하며 따라서 일반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고는 지

역경제권 형성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경제지정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은 지역사의 공유라는 잠재력을 지니면서도 지금까지 내부의 유기적 흐름이 원활치 못한 채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고 있다. 외적 자극에 힘입어 새로운 지역 아이덴티티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동북아 지역성의 형성은 역동적 과정으로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메카니즘은 공간적 측면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스케일간 역동성의 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케일에 관심을 갖는 지리학이 공헌할 부분이 많다. 경제지정학은 지리학의 바탕에 정치경제학의 통합적 요소인 정치-경제의 통합과 국내-국제적 통합을 결합함으로써 세계질서를 관류하는 흐름을 적실히 포착하려는 새로운 틀이다. 사회현상의 불가분성과 사회-공간의 불가분성을, 국가단위에 구애받지 않는 스케일로 조망하면서도 지방적/지역적 맥락을 잃지 않는 포괄적 관점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경제지정학은 세계질서의 근본을 땅덩이간의 경합으로 보는 비역사적 전통지정학이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註 >

- 1) Mackinder, H. J.,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pp.421-437. Heartland 개념은 후 일(1919) World Island 로 확대된다. Mackinder, H. J., 1904,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p.62.
- 2) Parker, G., 1985, Western Geopolitical Thought, pp.35-40.
- 3) Spykman, N. J., 1944, The Geography of the Peace.
- 4) Hepple, L. W., 1986, "The revival of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 5, No. 4, (Supplement), p.S25.
- 5) O' Tuathail은 이러한 통설을 비판한다. 맥킨더의 이념은 국가전략 제시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산업화/근대화에 대한 위기감을 가진 전통 귀족의 가부장적이고 낭만적인 보수이념을 대표한다는 특정계층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O' Tuathail, G., 1992, "Putting Mackinder in his place: material transformations and myth", POLITICAL GEOGRAPHY, Vol. 1, pp.100-118.
- 6) 1943년 맥킨더는 소련, 미국, 영국, 불란서가 독일을 점령하여 금후 독일이 무력에 의존하려 할 경우 항상 兩전선에서 전쟁이 촉발한다는 위협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방하고 있다.
- Mackinder, H. J., 1943,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Vol., 21, p.604.
- 7) 독일 지정학의 주요 개념은 생존공간(Lebensraum), 종족(Volk), 국가간의 끝없는 투쟁 등인데, Ratzel 류의 유기체론적 정치지리학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독일 지정학 자체를 사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생존공간의 규모가 민족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 Haushofer의 주장이 나치의 절대적 인종주의의 한 단면을 상기시키기는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치 정책의 바탕은 사악한 인종주의이며 독일 지정학은 나치의 영웅적/신화적/우생학적 이념에 동의한 Hennig등 극소수 이외에는 오히려 외면당한 형편이었다는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이전이 끝나고 전범으로 체포된 후 자살한 Haushofer가 1944년 히틀러죄로 체포되고 투옥당했다는 사실은 히틀러 치하 독일지정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독일지정학에 대해서는 Parker의 前掲書의 다음 논문을 참조. Paterson, J. H., 1987, "German geopolitics reassessed",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2, pp.107-114. Bassin, M., 1987, "Race contra space: the conflict between German Geopolitik and National Socialism",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2, pp.115-134.
- 8) Agnew, J. A. 1991, "Timeless space and state-centrism: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draft for N. Inayatullah et. al.(eds.), 1992, The Global Economy As Political Space: Essays in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10.
- 9) Keohane, R. O. (ed.), 1986, Neorealism and Its Critics의 3, 4, 5장(pp. 47-130)에 들어있는 K. N. Waltz의 글들을 참조.
- 10) Keohane, R.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 11) Fox, W., 1983, "Geopolitics and IR", in C. Zoppo and C. Zorgbibe(eds.), On Geopolitics: Classical and Nuclear, pp.18-29.
- 12) 이대근은 국민경제간의 상품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경제를 '관계론적' 개념으로, 세계경제는 세계규모의 생산체제에 주목하는 '상대론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대근, 1993, 세계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pp.21-27.
- 13) 이 역류액은 1981년 70억 달러에서 1983년 560억 달러, 1985년 740억 달러 등으로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 다국적기업의 이윤송금과 개발도상국의 자본해외도피(flight capital)까지 감안하면 국제금융에서 개도국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Gill, S. and D. Law, 1988,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p.151-153.
- 14) Gill and Law, 전거서, pp.xx-xxi.
- 15) 세계경제를 축으로 한 글로벌화는 지역(지방)간의 발전격차가 아니라 차이를 없애면서도 동질적 소비경제와 소비문화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본다.
- 16) 톰슨과 크래스너는 국가가 쇠퇴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특히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자본주의의 기초적 조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만도 국가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Thompson, J. E. and S. D. Krasner, 1989, "Global transactions and the consolidation of sovereignty", in E-O. Czempiel and J. N. Rosenau, Global Changes and Theoretical Challenges: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for the 1990s, pp.195-219.

17) Crane, G. T. and A. Amawi (eds.), 1991, *The Theoret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 Reader*, pp.22-25.

18) Gill and Law, 전제서, pp. xxi-xxii.

19) Fox, W., 1983, "Geopolitics and IR", in C. Zoppo and C. Zorgbibe (eds.), *On Geopolitics: Classical and Nuclear*, p.26.

20) 이와 관련하여 손병해는 지역 경제통합과 경제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구분하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은 의도적 집단형성으로, 경제의 지역화는 주로 민간기업의 초국가적 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機能的 차원으로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지역통합, 지역협력, 지역화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주로 손병해가 정의한 지역화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孫炳海, 1992, *경제통합론*, 2판, pp.62-67.

21) 梶村秀樹는 개국 직전의 조선, 일본, 중국에 가해진 외압의 강도와 질이 상이했다고 본다. 삼국의 개국당시 상품경제의 전개 정도가 대동소이했다는 전제하에 後進 자본주의 발전의 차이를 대외적 요인에서 찾는 外壓弛緩說의 입장에 선다. 梶村秀樹, 1983, "동아시아지역의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 김영호(편), *근대 동아시아와 일본제국주의*, pp.39-46.

22) 김영호, 1992, "동북아 신경제질서와 한국의 역할",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모색*, p.169.

23) Cumings, B.,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pp.1-40.

24) 국토개발연구원,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1권, pp.43-44.

25) 예컨대 구상 단계인 가칭 동북아개발은(NADB)이나 두만강개발관리회사(TRAMCO)에 대한 출자를 들 수 있다.

26)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및 기타 北美 등의 화교경제를 포함한다.

27) 김영호, 1992, 전제논문, p.145

28) 동아시아 지역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梶村秀樹, 1983, 전제논문, pp.26-32 참조.

29) Gill and Law는 미국이 장래 감소한 영향력으로도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논거로서 영어의 역할을 들고 있다. Gill and Law, 1988, 전제서, p.352.

〈 參考文獻 〉

국토개발연구원,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1권.

김영호, 1992, "동북아 신경제질서와 한국의 역할",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모색*, pp.141-173.

도마다케오, 유한빈(역), 1992, *움직이기 시작한 동북아경제권*, 동아출판사.

유우익, 1992, "동북아시아대의 민족생활권 구상",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편), *21세기 한국의 경제*. 복지. 국토, pp.213-257.

梶村秀樹, 1983, "동아시아 지역의 제국주의 체제로의 이행", 김영호(편), *근대 동아시아와 일본제국주의*, 한밭, pp.21-46.

손병해, 1992, *경제통합론*, 2판, 법문사.

심의섭외, 1992, *동북아경제론*, 명지출판사.

이대근, 1993, *세계경제론*, 까치.

Agnew, J. and Corbridge, S., 1989, "The New Geopolitics: The Dynamics of Geopolitical Disorder", in Johnston, R. and P. Taylor (eds.), *A World in Crisis?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pp. 266-288.

Bassin, M., 1987, "Race contra space: the conflict between German Geopolitik and National Socialism,"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6(2), pp.115-134.

Buci-Gluckmann, C., trans. by Fernbach, D., 1980, *Gramsci and the Stat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Cox, R.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Millennium* 10(2), pp.126-155.

Crane, G. T. and Amawi, A. (eds.), 1991, *The*

- Theoret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 Rea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mings, B.,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40.
- Fox, W., 1983, "Geopolitics and IR", in Zoppo, C. and C. Zorgbibe (eds.), *On Geopolitics: Classical and Nuclear*, Dord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pp.18-29.
- Fukuyama, F., 1991,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 Gill, S. and Law, D., 1988,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ramsci, A., ed. and trans. by Hoare, Q. and G. Nowell-Smith, 1983,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_____, trans. by Marks, L., 1957, *The Modern Prince and Other Writings*.
- _____, trans. by Lawrence and Wishart Company, 1985, *Selections from Cultural Writing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Gray, C., 1990, *The Geopolitics of Super Power*,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Hepple, L., 1986, "The revival of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5(4), (Supplement), pp.S21-36.
- Mackinder, H.,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23(4), pp.421-437.
- _____, 1943,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21, pp.595-605.
- _____, 1962,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ew York: Henry Holt and Co.
- O'Tuathail, G., 1992, "Putting Mackinder in his place: material transformations and myth", *Political Geography* 1, pp.108-118.
- Parker, G., 1985, *Western Geopolitical Thought*, London: St. Martin's Press.
- Paterson, J., 1987, "German geopolitics reassessed",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6(2), pp.107-114.
- Shizuo, M., 1968, "Asian regionalism", *Japan Quarterly* 15, pp.53-61.
- Spykman, N., 1944, *The Geography of the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 Thompson, J. and Krasner, S., 1989, "Global transactions and the consolidation of sovereignty", in Czernpiel, E.-O. and J. Rosenau (eds.), *Global Changes and Theoretical Challenges: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for the 1990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p.195-219.
- Wallerstein, I., 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oppo, C. and Zorgbibe, C. (eds.), 1983, *On Geopolitics: Classical and Nuclear*, Dord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A geopolitical economy speculation o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Jong-chul Lee*

Summary

World order changes, particularly in the aftermath of the decline of the socialist bloc, point toward reterritorialization on a global scale. Reterritorialization--frequently underpinned by such denationalizing forces as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localization--requires theoretical restructuring to overcome state-centric theses inadequately embedded in the premise of the perpetual state. Geopolitical economy highlights integration on two axes: the political and the economic, on the one hand, and the national and the supranational, on the other hand. Scale-sensitivity is the other pillar of geopolitical economy framework; geographers need to have their say in the debate. In Northeast Asian scene, regional cooperation is predicated on the exploitation of economic complementarity, intertwined with political commitments to a region-wide equality.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lso needs to be operated in such a way that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will be concomitant to each other, rather than that one will be traded off for the other. An articulate geo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should not fail to grab the implication of reterritorialization to be revealed in separate events but to be put together in a regional vein. This regional vein will then indicate a certain regionality on the supranational level.

Key Words : regional cooperation, geopolitical economy, state-centrism, globalization, localization, regionality.

* Seoul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Researcher